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임기가 끝나도 심판 면치 못할 것

등하불명.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간단?명료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주옥같은 구절이다. 지금 흘러가는 우리의 정국을 보면 바로 이런 단어들을 쏟아부어버려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역시 소인모리배 같은 일부 정치인들은 이 또한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어디에다 대고 이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조선 선조 때 당대 최고의 시객이었던 백호 임제는 그래서 좁디좁은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을 답답해했던가. 그 당시 또한 당파싸움이 극에 달할 때였다. 국가나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7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도 오랫동안 전쟁을 할 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겠는가. 죽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성폭행 당하고, 잡혀가는 등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을 것이다.

전후에도 정치인들과 관리들의 악행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겨버린 것 아닌가. 일제 36년사.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 이전부터 이미 일본에게 함락 당했었다. 대략 1900년부터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일제 46년사다. 무려 반세기 동안 혹독한 일제의 지배하에 온 나라가 신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족속들도 많았다. 일제에 빌붙어 득세한 친일파가 그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는 사이에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로, 태평양군도로 끌려 다니면서 처참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남자들은 징용되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면서 생지옥에서 또한 헤매야 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지만 국토는 두 동강이 나버렸고 이승만은 남한만의 정치를 시작했다. 이때 역시 일제의 주구들이 거의 모든 공직을 차지해버렸다. 그 이후 악독한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시작으로 전두환?노태우에까지 이르렀다.

그 이후에도 문민독재는 계속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항상 극소수 권력자와 그 아류들의 발판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뭔가를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엄청난 암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호가호위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부 족속들. 뱀의 혀를 마음껏 놀려대고 있다. 현란한 그들의 잡스런 기술에 일부 국민들이 현혹될까 두렵다.

우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야당의 일부 정치인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어쩔 때는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망나니 춤을 추는 것 같다.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서도 반토막 밖에 안 되는 당이 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들은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임기가 그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임기의 1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2020년 5월 29일까지가 그들의 임기. 선거는 그 안에 치러질 것이다. 공천은 더더욱 앞일 것이고. 사실 그들 중에는 함량미달자도 있고 구태가 질질 흐르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일당독주가 싫어 표를 주었었다. 그런데 역시나였다.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등하불명,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당의 대표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곰곰이 되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 않은가.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범죄행위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 기사를 자주 접한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거나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습관적으로 살피는 경우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전국 11년 1,523건 → 16년 5,185건/ 전남 11년 21건 → 16년 60건, 17년 9월 말기준 57건으로 연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발생장소로는 역사/터미널(11%)·노상(11%), 숙박업소(8.9%)순이다.

불법촬영장비들은 최근 들어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경, 시계, 라이터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휴대가 가능하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교묘하게 설치되는 등 발견이 어려워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초소형카메라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누구나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이 시급하다.

경찰에서는 불법촬영 영상 유통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계정 폐쇄 또는 게시물 삭제 요청, 접속차단(해외ip)등 조치 및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단속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장병완 의원은 불법촬영 카메라의 제조, 수입,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불법촬영카메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찰의 활동, 국회의 관련법 제정보다도 시민들의 대처 능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등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해야한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조직적, 반복적 성폭력사건(워터파크 불법촬영사건 등)은 보상금이 2000만원 이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불법촬영사건 등)은 1000만원 이하, 기타 일반 불법촬영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받을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로 올해는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김성윤 /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社 說

안전 챙겨야 할 '낚싯배'

낚싯배 수익이 짭짤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본말이 전도돼 아예 일반 어선을 낚싯배로 개조한 다음 성수기, 비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낚시업에만 열중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낚싯배 사고는 선박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낚싯배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다수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어획량이 부쩍 감소하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10t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1~3년 단위로 낚시업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낚싯배가 짭짤한 수익이 보장되면서 주말에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어민들의 본업을 능가하는 '부업'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와 관광 등을 동시에 할 수 있고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유선(레저용 배)과는 달리, 낚싯배는 낚시어선업법을 적용받아 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문제는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안전 관리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낚시꾼을 태우기 위해 고기창고를 승객실로 개조하는 일은 보편화됐고, 고속운항을 위해 엔진·기관을 신형으로 바꾸는 배들도 등장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선창1호'는 개조 과정에서 어창 등을 객실로 바꿔 정원이 5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안전관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실제 낚싯배 해양 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지난해 2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무분별한 선박개조를 막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藍 쪽 남
笞 죽순 순
象 코끼리 상
牀 평상 상

藍笞象牀

▷뜻: 푸른 대순과 코끼리 상이니, 즉 한가한 사람의 침대임.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